현장과 시각

예산 삭감이 보복이었다면

최재호
체육부 차장

광주시의회 J의원이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생체협) 사무실 개보수 예산 4천5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J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예결위에서 올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생체협의 예산에 대해 낭비성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시의 예산집행을 감시·견제할 책무가 있는 시의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삭감의 칼을 대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이 조치가 J의원의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예산을 삭감당한 생체협 측은 J의원이 올 봄 광주 북구 생체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경쟁후보였던 현 북구 생체협 회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이 북구 생체협 사무국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J의원은 지난 19일 생체협 사무처장 등 65명의 생체협 간부들이 예산삭감 이유를 따지러 시의회를 찾아온 자리에서 자신의 조치에 개인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발언을했다. J의원은 "북구 생체협 회장 선출과 관련한 사적인 감정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시 사무처장의 질문을 받자 "못을 뺀다고 못 자국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J의원이 대화중 어떤 맥락에서 '못자국'발언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는 여전히 삭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체협 사무실을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 비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이사들이 사무실을 넓히고 인테리어를 바꾸겠다는 것은 낭비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의원이 심의해도 삭감될 예산이다"고 말하고 있다.

생체협 간부들은 '시의원에게 밉보여서'불이익을 당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생체협 간부들은 J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 노골적인 감정표현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J의원은 생체협 선거에서 자신이 낙마한데 일조한 인물이 왜 북구 생체협 간부로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며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심하게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법인 허가와 관련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는가 하면 성폭력 의혹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판이다.

아무리 결과가 이성적·합리적이라고 해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공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인의 행위는 더욱 그 동기가 명징해야 한다. J의원의 예산삭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면 권력을 '휘두른'것에 불과하다.

/lion@kwangju.co.kr

'분당 책임론' 치열한 공방

민주 당대표 경선 광주 토론회…지방균형 발전 한목소리

통합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 후보는 24일 광주MBC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안 문제와 '열린우리당 이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추미애·정세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도중에 끊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추미애 후보는 정세균 후보에게 "지난 2006년 5~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임시 당의장을 지내며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장관직 제의가 왔다고 당과 상의도 없이 당을 떠났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당시 원내대표 맡으면서 당 지지율이 5% 올랐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직을 요청해와 지도부와 상의해 맡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추 후보는 이어 "민심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못 이끌어 민심을 떠나보낸 분은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것인데, 모르느냐"며 몰아세웠고, 정 후보는 "민심을 추 후보가 만드는 것 같다, 대안 정당으로 만들 복안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라"며 날을 세웠다.

정대철 후보도 열린우리당 논쟁과 관련해 정세균 후보를 겨냥,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실패했던 것, 잘못됐던 것을 들춰내 반추해보면서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며 거들었다.

정세균 후보는 정대철 후보에게 "열린우리당과 함께 한 시간은 이력서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냐"며 공세를 펼쳤고, 정대철 후보는 "열린우리당은 이후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해 연패했다. 당 대표도 일년에 서너번씩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열린우리당 시절 냄새는 가능한 버리고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안 문제와 관련, 세 후보는 지방균형 발전의 경우 "민심을 바탕으로 한 지방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칠 것"(추미애), "균형있는 지역발전은 국가의 의무로 지켜져야 한다"(정대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변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정세균)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통합민주당 정대철, 추미애, 정세균(오른쪽부터) 당 대표 후보들이 24일 광주MBC 방송국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대표경선후보 TV토론회'에 참석,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6자회담 재개 일정 협상중"

중국 외교부는 24일 차기 북핵 6자회담의 일정과 관련, 아직까지 참가국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회담의 일정과 관련, "의장국인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의견과 견해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가 아직 중국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중국은 북핵 2단계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3단계로 하루빨리 진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2단계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반도의 비핵화가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답한 뒤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최근 큰 진전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오는 26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6자회담 당사국은 신고서 제출 뒤 차기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달라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26일로 예상되는 신고서 제출 직후인 이번주 중에라도 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회담 재개에는 동의하면서도 핵 신고 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둔 뒤 회담을 열자는 생각이어서 협의에 다소 진통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개전 첫 신호탄 발사 소련 국적 고려인 장성이 명령"

당시 인민국 국장 증언

한국전쟁 당시 북한 수뇌부의 개전계획에 따라 첫 신호탄 발사 명령을 내린 인물은 소련 국적 고려인인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이라는 당시 북한 문화선전성 부상의 증언이 나왔다.

1945년 소련군 장교로 김일성 부대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 한국전에 참전한 고려인 정상진(90·문학평론가)씨는 한국전쟁 발발 58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시 유 국장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연해주에서 태어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됐다는 정씨는 또 김일성이 1949년초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남침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음해 4월 다시 소련을 비공식 방문, 끈질긴 설득 끝에 승인을 받아낸 사실도 아울러 공개했다.

한국전쟁 종전후 소련파 숙청으로 쫓겨간 정씨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외치면서도 1946년부터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가며 남침을 준비했고 이승만 정부가 이끄는 남한도 '무력통일'을 외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1950년 6월25일 막상 전쟁이 일어난 직후 북한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승만 도당이 북침해 인민군이 2시간만에 격퇴한 것'으로 선전했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송영길·박주선·김민석 3강

5명 뽑는 민주 최고위원 9명 경쟁

통합민주당 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두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9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현재까지 송영길, 박주선, 김민석 후보가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정균환, 안희정, 김진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영길 의원은 일단 386그룹과 열린우리당계의 지지를 받고 있어 득표 1위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선두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과 함께 1위 득표를 겨루는 후보는 박주선 의원. 그는 가장 많은 대의원 수를 가진 광주·전남지역의 유일한 후보라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더욱이 구민주계의 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 대표를 지지했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박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계파를 초월해서 지지세력이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구 민주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위권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대선 경선, 최고위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전국적 조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은 두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하다.

우선 친노세력을 대표하는 안희정 후보는 386 낙선 그룹과 강원·영남권의 지원을 받아 당선 안정권 진입을 꾀하고 있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전북지역 대의원과 구 민주계 중 통합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 교육·경제 장관 출신의 김진표 의원은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정세균 의원의 추천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져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 사고지역 분류 반발 정영식 前차관 단식 농성

정영식 전 행자부차관이 통합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한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 24일까지 6일째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박지원 후보에게 패했던 정 전 차관은 7·6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전국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정종득 목포시장, 김종현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목포지역위원장 후보로 신청했다.

당 조직강화특위에서는 이들 후보에 대한 심사를 거듭한 끝에 김 부총장을 지역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당사자가 조직강화특위 위원이었다는 비판에 부딪히면서 선정이 보류됐고 결국 최고위원회로 선정권을 위임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는 지난 17일 뚜렷한 이유 없이 목포지역을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 지역위원장 선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당 주변에서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 전 차관이 19일부터 당사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정 전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명분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목포지역위원장 선정을 보류한 것은 지역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자 지역민들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